



## 헝가리

# 재정수지 관리 시급한 경제현안으로 대두

IMF는 금년 6월 6일 발표한 보고서<sup>1)</sup>를 통해 헝가리의 과다한 재정적자의 지속 추세가 거시경제 안정성 및 성장을 저해하는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6월 10일 헝가리의 규르차니(Ferenc Gyurcsany) 총리는 조세인상 등을 통한 재정적자 축소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재정개혁정책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헝가리 정부가 이 정책을 발표한 지 일주일도 채 지나지

않은 6월 15일, Fitch에 이어 S&P가 동국의 국가신용등급을 종전의 A-에서 BBB+로 한 단계 내렸다.<sup>2)</sup> Fitch와 S&P는 경제 규모에 비해 재정적자가 과중하고 또 개선조짐이 없는 점을 등급 하향조정 결정의 주요 요인으로 지적하였다. S&P와 Moody's로부터 각각 부정적(negative) 등급전망을 유지하고 있는 헝가리는 정부채무 급증세가 지속될 경우, 추가적인 등급하락 가능성마저

〈표 1〉 3대 신용평가기관의 헝가리 국가신용등급 변동추이

S&P	Fitch	Moody's
BBB+(2006. 6. 15)	BBB+(2005. 12. 6)	A1(2001. 11. 29)
A-(2000. 12. 19)	A-(2000. 11. 30)	
BBB+(2000. 2. 2)	BBB+(1999. 10. 29)	
BBB-(1996. 10. 28)	BBB(1997. 6. 24)	
BB+(1992. 4. 20)	BBB-(1996. 4. 25)	

자료: S&P, Fitch, Moody's, 2006. 6. 15.

1) IMF, *Article IV Consultation: Concluding Statement of the IMF Mission*, 2006. 6. 6.

2) 1992년 4월 20일에 S&P가 최초로 국가신용등급을 BB+로 부여한 이후 헝가리의 등급하향은 이번이 처음임.

안고 있어 정부의 재정수지 관리가 가장 시급한 경제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다.

### 재정부문 개혁정책 발표

규르차니 총리가 지난 6월 10일에 발표한 재정부문 개혁정책은 향후 2년 반에 걸쳐 추진될 예정이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조세인상으로 인한 세수기반의 확대를 들 수 있다. 2006년 1월부터 시행된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인하조치로 재정수입 기반이 축소되었으나 이번 개혁정책으로 소득세, 부가가치세, 사회보장세 등이 다시 인상될 예정이다. 특히 법인세의 경우, 외국인 직접투자(FDI) 유치경쟁이 치열한 지역을 대상으로 종전의 16%에서 20%로 인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일부에서는 이러한 조세인상 조치를 두고 중·동부유럽의 주변 국가들과의 조세환경과 비교<sup>3)</sup>할 때 FDI 유치 등에서 헝가리의 경쟁력 하락을 우려하고 있다.

둘째, 재정적자 축소를 위해 조세인상과 같은 단기적인 조치 이외에도 민간부문 역할 확대, 의료보험 공동부담 방안 도입, 공공교육 개편, 지방자치 행정의 통합 등의 장기적인 계획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지방정부 구조조정 추진에는 국회에서 2/3 이상의 찬성표를 얻기 위해 주요야당인 청년민주연합(Fidesz)의 동의를 끌어내야 하는 점과 이번 재정개혁 시행과 관련한 집권여당인 헝가리사회당(MSZP) 내부에서의 반발 등이

효율적인 재정개혁 추진에 상당한 제약적인 요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5년 연속 재정적자 목표달성에 실패했던 헝가리 정부는 조세인상 및 공공부문 지출삭감 노력에 힘입어, 재정수지 적자를 2006년 GDP 대비 8.0%에서 2007년에는 5.0%, 2008년에는 3.0%로 단계적으로 축소해가면서 2011년 유로화를 도입할 계획이다. 규르차니 총리가 이번 재정개혁의 시행으로 재정관리 체계의 체질개선을 기대하고 있는 반면, 지나친 조세인상 의존은 장기적으로 투자 및 고용창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의견도 분분한 상황이다.

### IMF, 재정개혁 실효성에 대해 회의적

IMF와 헝가리 정부는 재정적자 축소방안에 대해 서로 상반된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sup>4)</sup> 재정적자 축소를 위한 해결방안으로 IMF가 연금, 가족수당 및 주택보조금 등의 삭감을 제시하고 있는 반면, 규르차니 총리는 사회복지 부문에 대한 지출삭감은 단순히 거시경제적인 측면에서만 생각해서는 안 되며 정치·사회적인 측면도 고려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 같은 양측의 근본적인 견해차는 지난 6월 6일 IMF가 발표한 보고서에도 잘 드러나고 있다.

IMF는 헝가리 정부가 신속하게 재정상황에 대한 심각성을 지각하여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한 개혁의지를 표명한 점은 긍정적

3) 중부유럽 주요 3개국의 법인세를 비교하면 슬로바키아 19%(2004. 1. 1 이후), 폴란드 19%(1996년 40% → 2005년 19%), 체코 24%(2004년 28% → 2006년 24%)임.

4) Financial Times에 따르면, IMF는 6월 6일에 발표한 보고서 작성 시 이미 헝가리 정부의 전반적인 재정개혁안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됨.

으로 평가하였으나, 구체적인 재정개혁의 실천방안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근거로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첫째, 대규모 재정적자 축소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조세인상보다 재정지출 삭감이 더욱 효과적이라는 것이다. S&P도 지적했듯이 새로 도입된 재정개혁 프로그램이 지나치게 재정수입 증대 측면을 강조하고 있으며, 정작 헝가리 재정관리 부문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만성적인 재정지출 압력 측면은 간과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조세인상을 통한 재정수입 확대방안은 관료주의 비효율성 확대, 투자감소 등을 유발하여 장기적으로 헝가리의 경쟁력 및 경제성장을 저해할 수 있으며, 조세회피 등으로 정부가 예상하고 있는 만큼의 재정수입의 확보가 어려울 수도 있다는 분석이다.

한편, IMF는 이보다 공공부문 종사자들이 할당된 예산을 초과하는 재정지출 관행

등을 시정 및 개선하는 것이 더 중요함을 지적하고 있다. 또한, 당초부터 헝가리의 사회복지 프로그램 및 재정지출 정책이 좀 더 효율적으로 계획되었다면 사회의 경제적 약자들이 큰 피해나 불이익을 당하지 않고 재정지출 삭감조치가 단행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는 등 공공서비스 부문의 보다 효율적이고 현대화된 구조개혁을 강조하였다.

둘째, 재정관리 부문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투명성 및 신뢰도를 제고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 동안 지속적인 재정적자 목표달성 실패, 회계기법 변경 및 잦은 조세제도 변경 등은 동국의 재정부문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예를 들어, 공식적인 국회의 승인절차 없이 재정지출을 남발하거나 전 회계연도의 미사용 예산의 이월 문제 등 재정관리 부문의 신뢰를 저해하는 관행은 중지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IMF는 헝가리의 재정지출 절차가 정부예산

〈표 2〉 주요 국내외경제지표

단위: 백만 달러, %

	2001	2002	2003	2004	2005 <sup>e</sup>	2006 <sup>f</sup>
경 제 성 장 률	4.3	3.8	3.4	4.6	4.1	4.4
재 정 수 지 / G D P	-3.4	-8.5	-6.2	-5.6	-6.1	-8.0
소 비 자 물 가 상 승 률	9.2	5.3	4.7	6.8	3.6	2.3
경 상 수 지	-3,200	-4,700	-7,200	-8,600	-8,000	-9,500
경 상 수 지 / G D P	-6.1	-7.2	-8.7	-8.6	-7.3	-8.0
상 품 수 지	-2,200	-2,100	-3,300	-3,000	-1,900	-2,700
수 출	31,100	34,800	43,500	56,100	61,800	70,800
수 입	33,300	36,900	46,800	59,100	63,800	73,500
외 환 보 유 액	10,302	9,721	12,015	15,312	18,283	-
총 외 채 잔 액	30,300	35,000	45,800	59,800	66,200	77,600
총 외 채 잔 액 / G D P	57.9	53.3	55.1	59.4	60.7	65.9

자료: IMF, *IFS*, May 2006 및 EIU, *ViewsWire*, June 2006.

의 투명성 및 일관성을 감찰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독립기구 설립 등을 통해 보다 엄격하고 투명하게 관리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최근 공공채무 및 외채 급증, 포린트(forint)화의 가치하락 등 재정관리 부문의

개선이 어느 때보다도 시급하게 요구되는 가운데, 재정개혁 도입 단계에서 보여준 헝가리 정부의 개혁의지가 시행단계까지 꾸준히 이어질 것인지에 대한 귀추가 주목되고 있는 시점이다.

**【최 은 경】**